

네덜란드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열악해지는 여성의 삶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3·22 국제 공동 행동	아쉬운 금속노조의 2월 25일 투쟁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통삼임금 정상화! 실노동시간 축소!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제국주의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인식 인쇄인_ (주)아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9면	5면	8면	6면	6, 12면	14~15면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09

Left21.com

제121호 | 2014년 2월 24일 ~ 3월 9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철도 노동자들, 다시 투쟁 전선에 서다

3~4면



사진 출처 (민중의 소리)

의료 민영화 반대 6월 파업을 결의한 보건의료노조 16면

삼성에 맞서 파업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2면

3월 초 파업을 준비하는 대학 청소 노동자들 7면

새로 떠오르는 유치원 교사들의 운동 11면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는 말을 많이 기억해 달라.”

박근혜, 규제개혁이라 쓰고
자본가 돕기라 읽는 게 아니고?

“강직하고 침착하고 일관성 있고, 무덤덤한 성격 ... 그 다음 무결점 그런 것도 많이 닮았고 완판녀라는 공통 점도 있다. ... 김연아 선수는 스포츠에서의 최고의 여성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지도자로서 최고의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

최고는 최고를 닮는다고?
형광등 1백 개에 이은 TV조선의 박미어천가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국정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해

“폐지 실은 손수레와 여행용 가방 중에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

국민연금공단 광고 수상작,
용돈 연금으로 여행갈 수는 있나?

“최저방 DMZ(비무장지대)나 민통선 안쪽 지역 땅에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대박이 날 것”

김문수, 이것이 통일대박?

“자녀 하나 낳은 분들은 반성하셔야 한다. 이해훈 최고위원은 애를 셋이나 낳고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느냐.”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

저출산이 문제라는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빨갱이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정신 안 처리면 자녀들이 큰일 난다.”

영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연출자 서세원의 걱정

“반드시 이승만 영화를 영화사상 가장 히트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 국방부장관 이상훈, 너무 큰 포부?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서 시위를 하면 문제 없고 심지어 응원까지 하지만 터키나 스페인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유럽 블로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전국 파업으로 조직력을 키우다

조명지

전국 31개 분회, 1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 2월 5~8일 나흘간 전국 규모의 첫 파업을 성공적으로 벌였다.

삼성은 본사 인력과 퇴직자, 동네 전파상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며 파업 효과를 차단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노조 조직률이 높은 경남, 부산, 울산 등지에서는 센터들이 문을 내려야 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시간을 끌며 버티던 사측이 3월 5일 임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조직도 확대되고 있다. 파업 기간 1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했고, 미조직 센터 1백10여 곳에서 노동조합 가입 문의가 들어왔다.

쟁의권을 획득한 분회들이 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2월 18일에는 순천센터 노동자들이 첫 파업을 벌였다. 2월 25일에는 쟁의권을 획득한 노동자들이 모두 파업하고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신문 광고까지 냈고,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들이 “경력 1년차 연봉 5천만 원”을 요구한다며 “귀족노조”, “황제노조”라는 황당한 비난도 하고 있다. 최종범 열사가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비난에 “열불이 터진다”고 말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노조에서 3천6백9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정 노동자 임금의 70퍼센트밖에 안 되요. 우리가 ‘황제’면 연봉이 52억 원인 삼성전자 이사는 뭐가요?” SNS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올린 “30만 원, 40만 원짜리 임금 명세서”가 줄을 잇고 있다.

마이너스 70만 원

“노조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월급 명세서를 달라고 했어요. 건당수수로[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제품 수리 횟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명세서에는 기본급을 주는 것처럼 해 놔는데 ‘기본급 1백만 원, 성과급 마이너스 7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30만 원 받는 거죠. 5만 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삼성을 바꿔서 사회를 바꾸자!” 그 누구보다도 삼성 노동자들이 할 수 있다. 2월 5일 서울권역 파업 출정식.

수도권과 포항의 센터들은 “고객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몹벌보’를 착용한 노동자들에게 일을 안 주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제품 수리 횟수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몹벌보 벗기를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지만 몹벌보 절대 벗을 수 없어요. 임금이 줄어도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뒤에는 삼성이 있어요. 바지(협력업체 사장)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삼성과 싸워야 해요. 바지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고, 조합원들의 일감을 비조합원들에게 넘겨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특히, 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더는 노동조합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싶을 것이다.
민주노총,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자들이 굳건히 버티며 싸울 수 있도록 재정 후원 및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기금 후원 계좌
외환은행 620-226916-411
위영일(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

삼성에 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2백여 개의 정당·노동·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2월 20일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삼성의 “민주주의 파괴와 부정비리, 법치주의 파괴, 공공성 침해”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온갖 만행을 저지른 삼성에 맞서 폭넓게 운동을 벌일 기구가 출범한 것은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된 데에는 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의 죽음을 기리며 출범한 열사대책위가 열사 투쟁 이후 전환한 기구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에 대해 감

시·협박·폭행·납치 등 온갖 악랄한 탄압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의 A/S 엔지니어들이 전국적인 노조 건설에 성공해 삼성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민주노총의 말처럼 “삼성전자서비스의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어찌면 다시는 접할 수 없는 ‘대(對)삼성 투쟁’의 절체절명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조직된 노동계급

그런데 일각에서는 “노동을 너무 부각하면 폭넓은 연대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 삼성에 맞서 ‘소비자 운동’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끔찍한 산업재해, 부정비리, 의료 민영화 추진, 환경 파괴 등 우리가 삼성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삼성의 온갖 악행을 폭로하고, 삼성에 맞선 운동

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에 맞선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이다. 삼성이 그토록 악랄하게 노동조합을 막고 있는 것도 삼성의 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삼성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파편화돼 있는 ‘소비자’가 소비자 보이콧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보다도 조직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모을 때, 운동을 확대하고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가공할 탄압 속에서도 삼성의 무노조 신화에 도전하는 삼성 노동자들에게서, 은폐된 죽음에 저항하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삼성이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무엇보다도 삼성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연대하는 데 중심적 구실을 하기 바란다.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3월 10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넌편 (오아시스빌딩 앞) 19:30~20:3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3월 11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8:30~19:3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3월 12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호 가판은 3월 13일)

울산 성동삼점 접합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10~12일)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월요일 12:00~13:0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입구 화요일 12:00~13:0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화요일 12:00~13:00
부산대(부산) 정문 수요일 17:30~18:30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2·25 경고파업 결의
철도노동자 지구별 야간총회
2월 24일 (월) 오후 8시 | 전국 각지역 | 주최 : 철도노조

철도 분할민영화 철폐 노조탄압 분쇄
성실교섭촉구!
철도노동자 5차 상경 총력결의대회
2월 25일 (화) 오후 3시 | 서울시청 광장 | 주최 : 철도노조

의료비폭탄 환자안전 위협 국민건강 파괴!
의료공공성 붕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월 25일 (화) 오후 2시 | 여의도 국회 앞
주최 : 보건의료노조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혁 저지!
총파업 및 국민파업의 날
2월 25일 (화) | 서울시청 광장(전국 동시다발)
오후 4시 국민파업대회 | 주최 : 국민파업준비위원회
오후 7시 국민촛불대회 | 주최 : 국민파업준비위원회, 국정원 시국회의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인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안드로이드 앱 출시

새 온라인 기사와 신문이 나오면 알려 드립니다.
(레프트21)의 최신 기사를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oo.gl/evF3xg>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olidarity.org>)

노동자연대다함께 경기 지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삼성에 맞선 저항
- 삼성은 어떻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저항

연사 :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인공 노무사 난주의 실제 모델)
박성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일시 : 2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회의실 (수원역 8번 출구 3백미터 메신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000원 (학생 1,000원)
문의 : 010-8700-4647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 지회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연사 : 안의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일시 : 3월 25일(화) 오후 7시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000원 (학생 2,000원)
문의 : 010-5004-1880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가 연일 공공부문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쏟아내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2월 25일 경고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철도공사가 막무가내로 탄압을 가하고 전방위적 구조조정 시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정부가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인데, 신흥국 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심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처해 긴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역에서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표적 삼아 단협·임금 등을 공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커다란 저항과 반감을 샀던 철도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측은 이미 연내에 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화물 자회사 설립 등 분할 민영화도 속도를 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인력감축도 시작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선포 다음 날, 박근혜는 다시 한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들도 '원칙 있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벌어지는 대량 징계, 고소고발, 거액의 손해배상과 노조기금 가압류 같은 공세에도 노동자들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3월 초 시행을 앞둔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는 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서게 할 만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환배치는 근무평가 등을 통해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들의 사기는 여전히 살아 있다 12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인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고,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해,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조직력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발전과 KT 등에서도 추진된 이 상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얼마나 악명을 떨쳤는지 알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다. 기관사와 차량 정비 노동자들은 열차 안전을 내팽

개치고 추진되는 인력 감축 시도들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치열한 전투

기관사들은 열을 동안 이어진 성공적인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에 이어, 2월 19일 서울역에서 관리자 수백 명의 방해를 물리치고 농성을 벌였다. 기관사들은 직종 파업까지 결의했다.

2월 17일부터 공사가 강행한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운영은 서울차량 노동자들과 해당 수송원 노동자들의 실력 행사로 일주일째 무력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월 25일 파업 후 확대쟁대위를 열고 이후 투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중앙 집행부 내에서도 '1차 경고 파업으로는 부족하다'며 2·3차 파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출돼 논의되

고 있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해 파업에 이어 최선두에서 박근혜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현장 투쟁들이 2월 25일 파업으로 모아지고 있고, 이 파업의 성공은 앞으로 계속될 치열한 전투의 훌륭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원

인력 감축, 노동자 간 경쟁 강화 전환배치 중단하라

철도공사의 대대적인 강제 전환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측은 노조와 일절 협의도 없이 3월 초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밀어붙일 기세다. 이미 서울차량 24명, 고양차량 40명 등 지부마다 전환배치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도에서는 1990년대 후반 우파노조 시절 용산기관차 노동자들을 동해로 강제 발령냈다가 한 기관사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후, 사측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합부로 강제 전보를 추진하지 못해 왔다.

2009년 파업 이후에도 열차승무지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성 강제 '순환 전보'를 추진해, 꽤 거센 항의와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철도공사가 진행하려는 강제 전환배치는 규모가 2천여명에 이르고, 기본적으로 직종을 가로질러 무차별 진행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반감과 위기감이 몹시 크다.

사측은 이 전환배치를 통해 노동자들 간 경쟁을 강화시키고, 현장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 이것은 노조의 조직력 약화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전환배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악랄한 구조조정 방식이기도 하다.

발전노조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2009년 발전노조 파업 이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노조 무력화와 인력 감축 부르는 전환배치 반대한다" 2월 14일 서울역 기자회견.

2010년과 2011년 발전노조에서 대규모 강제 발령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드래프트제, 상시퇴출제라는 이름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령나거나 해본 적 없는 일에 배치됐다. 또한 관리자 등의 지명을 받지 못하면 해임당하기도 했다. 이는 발전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졌다. 당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발전노조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고, 발전회사들은 강제 전환배치를 활용해 친기업 노조 세우기를 시도했다.

노조 무력화

최근 철도공사도 3월 1일부터 1인승무를 시행해 남은 기관사 28명을 전환배치할 예정이고, 차량 정비 주기를 연장해 차량 노동자 87명도 전환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초에 시행될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정을 수반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올해 물류 자회사 분할 추진, 수서 KTX 기장 확보 등으로 대규모 인력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사측의 전환배치를 저지하는 것은 노조 무력화와 인력 감축에 모두 맞선 투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철도공사는 전환배치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고 강제 전환배치를 '희망 전보' 신청자 전보와 함께 추진하며 분열 효과를 노리려 한다. 이에 노조는 '1차 전환배치 계획인 희망전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조합원들에게도 희망전출을 신청하지 말고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백은진·이정원

요금인상, 인력감축, 철도 분할 민영화 가속 공항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정부와 철도공사가 올해 안에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는 2001년 철도청이 현대건설시업과 민자협약을 체결해 2007년에 개통한 국내 첫 민영 철도였다.

당시 정부와 철도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엉터리 수요 예측에 기초해 운영 기간 30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퍼센트를 보전해 주겠다고 사기업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예상치의 10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공항철도의 적자 폭은 나날이 늘었고, 결국 철도공사는 사기업들에게 3년간 보조금을 약 3천억 원이나 지원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공항철도의 요금은 수도권 전철에 비해 적어도 세 배 이상 비쌌고, 환승 할인도 되지 않아 이용객의 부담도 컸다.

결국 공항철도가 '돈 먹는 하마'가 되자 정부는 철도공사에게 2009년 자회사 형태로 공항철도를 인수하게 했다. 즉,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정부 지원금을 마구 퍼주다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결국 공기업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공항철도를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 사업체로 민영화 논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뻔뻔스럽다. 국토부가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하고 4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지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부터 호시탐탐 공항철도 매각을 노린 것이다.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한 이후 공항철도 요금은 떨어졌고 다른 교통편과 환승도 되면서 하루 이용객이 무려 열 배 이상 늘어났다. 공항철도는 공기업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공공재' 기능

을 한 것이고, 이제 한해 영업이익을 1천 5백억 원가량 내는 '알짜배기' 수익 사업이 됐다.

그런데 국토부는 '현재의 공항철도 혹은 정부는 보조금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각을 하려 한다. 이것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조차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요금 인상

공항철도를 민영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과 철도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공항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은 뻔하다. 이는 맥쿼리가 운영하던 시절의 지하철 9호선과 민간이 운영하던 시절의 공항철도 요금이 얼마나 비쌌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공항철도로 벌어들이던 수익과 정부 보조금이 사라지면, 철도공사는 적자가 늘어났으며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구실로 삼을 것이다. 이미 열악하기로 유명한 공항철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더 후퇴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항철도 민영화는 수서 KTX에 이어 '경쟁하는 복수의 철도 운영' 시스템을 확대해 향후 철도 민영화를 가속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에게는 대량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를, 이용객들에게는 요금인상과 안전위험을 불러올 공항철도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백은진

기관사들이 1인승무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인승무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을 깨려고 투입했던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3월 1일부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를 강행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대형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거듭 안전 위협을 경고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말이다.

오히려 공사 사장 최연혜는 “노사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안전”을 운운하며 중앙선 1인승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세중 청량리기관차지부장의 말처럼 “철도 전문가인 최연혜 사장은 1인승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최연혜가 1인승무를 밀어붙이는 것은, 기관사 인력을 줄여 향후 적자선 축소·매각과 화물 자회사 분리 등 분할 민영화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다. 공사는 1인승무 시행으로 남는 ‘여유’ 인력을 전환배치 하려는 계획도 내놔다. 기관사들 사이에선 ‘우리가 강제 전환배치의 표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화물열차 감축 운행, 기관사 사무소 통폐합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조준

무엇보다 철도노조 운전국이 지적했듯이 지금 사측의 공격은 기관사들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최연혜가 “1인승무는 꼭 하고 나가야만 다른 사안도 경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데서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기관사들이 파업에 돌입해

힘을 과시하면 1인승무 시행과 사측의 대대적인 공격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청량리역에서 1인승무 저지 시위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과 철도 민영화 저지 대책위 활동가들 1백여 명이 연일 시위를 벌여 1인승무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지난 파업에서도 ‘선봉 부대’ 노릇을 톡톡히 하며 저력을 보여 줬던 기관사들을 굴복시켜 1인승무를 관철해야, 앞으로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민영화 추진에서도 저항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관사들은 1988년, 1994년 파업으로 노조 민주화에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고, 2000년대 이후 파업들에서도 핵심 부대 구실을 해 온 강력한 투쟁 전통이 있다. 이는 대대적인 공공부문 시장 ‘개

혁’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사측에겐 큰 걸림돌일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의 기세를 보면 사측의 3월 1일 시행은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기관사들은 강력히 저항해, 열흘간 지속된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1인승무, 강제 전환배치 철회 등을 내걸고 기관사 직종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기관사 확대 간부 수련회에서 3월 1일 1인승무 강행

을 대비해 3월 말까지의 투쟁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기관사 파업을 앞장서 주장한 투사들은 2월 25일 파업 이후, 기관사 파업 조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설사 3월 1일 시행이 강행되더라도 투쟁은 계속될 것인데, 지금 기관사 파업을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사들이 파업에 돌입해 힘을 과시하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 시행과 사측의 대대

적인 공격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투사들은 기관사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철도노조 내 타 직종 노동자들은 기관사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기관사들이 무너지면 사측은 더한층 날뛰며 노동자들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원

기관사 1인승무 저지 투쟁

시범운영 저지에 힘입어 지속되는 투쟁

12월 19일, 서울역에서 기관사들을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 1백 여명이 1인승무 저지를 위해 농성을 벌였다.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 지부장, 운전국장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사측은 1백 명이 넘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내려 했으나 노동자들의 투지가 높아 역부족이었다. 역사 밖에 경찰 병력까지 배치했으나 노동자들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농성 참가자들은 예정대로 연좌 시위, 농성, 홍보전을 이어갔다.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들은 그 전 10일간 실시된 1인승무 시범운영도 막아냈다. 이 투쟁에서 보여준 기관사들의 투지

는 매우 놀라웠다. 사측은 비열한 꾀수를 부리며 시범운행을 강행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의 민첩한 대응과 거센 항의 때문에 실패했다. 부기관사들은 징계 협박에 굴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 사측 관리자의 만행으로, 영주기관차지부장은 열차에서 추락하기도 했다.

투지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들의 단호한 투쟁은 점차 다른 지부들의 연대를 끌어내며 확대됐다. 서울차량 조합원들은 사측이 꾀수를 부려 수색에 몰래 마련한 임시 열차의 검수 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들의 투쟁에 연대했다. 서울지역 대책위와

제천 지역대책위의 헌신적 연대로 노동자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고무하는 데 일조했다.

사측은 이런 투쟁과 연대 확대의 압력을 받아 2월 17일부터 시행된 대전·부곡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애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서야 했다. 사측 관리자인 팀장을 탑승시키되 그를 부기관사로 지정해 태우는 꾀수를 부렸지만 말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직면했지만, 사측은 3월 1일 1인승무를 강행할 태세로 시행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리고 반격도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으려 감사실 출석 통보를 하고

급기야 노동자 12명을 고소·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지는 여전하다. “사측은 감사실로 불러 강제전출 1순위로 협박하겠지만 근무표대로 내 차에 내가 탄 것뿐이다. 지금 부기관사들은 노조가 1인승무를 전면 거부하라고 하면 거부할 각오를 하고 있다.”

박세중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연혜는 재무 건전성, 민영화 사전 작업을 하려고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1인승무는 강제 전출 등 철도노조 전체를 휘감는 문제가 될 것이다. 철도노조 전체가 싸워야 한다.”

김은영

안전을 위해 열차 정비 축소에 맞서 싸우다

철도공사가 수도권에서 차량 정비원들이 담당했던 화물열차 출발검수(출발시 하는 정비 업무)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 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2월 17일부터 업무를 넘기려 했지만 서울·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차량의 정비 노동자들은 사측의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화물차량 출발검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서울차량 노동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위험천만하게도 철길 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 활동가들이 연대해 사측의 시도는 통쾌하게 좌절됐다.

화물열차 출발검수는 최종적으로 열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서울차량 노동자는 “지금까지 10년, 20년 경력이



화물열차 출발 검수를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맞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있는 전문 정비원이 담당해 온 일을 정비 기술이 없는 수송원들에게 하라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출발검수 업무를 형

식적으로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감축, 비용 절감에만 눈이 멀어 열차 안전은 뒷전인 것이다.

실제로 2011년에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 일을 수송원들에게 떠넘긴 이후 화물열차 사고가 잦아졌다. 무리한 업무 때문에 추락해서 죽고, 발목이 절단되는 산재 사고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열차 정비는 정비원이, 수송은 수송원이”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위협

게다가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폐합은 향후 물류 자회사, 차량정비 자회사를 설립해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철도공사는 올해 물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최근 잇따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화물열차 역을 1백94개에서 75개로 줄이고 화물열차 운행 횟수도 20퍼센트 줄여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인력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 매각을 쉽게 만들려는 것이다.

최근 철도공사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무리하게 정비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차량분야에서 87명을 줄이려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정비 주기를 24개월에서 32개월로 늘리고, 수도권 전동차의 운행 거리에 따른 정비주기를 7백 킬로미터에서 무려 5천 킬로미터로 늘릴 계획이다. 화물차량은 3개월마다 해 오던 정비를 엇갈리게 한다.

그러나 무리한 정비 축소 때문에 이미 올해 초부터 새마을호가 탈선하는 등 사고가 연이어 벌어졌다. 철도 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정비 노동자를 2천5백 명 넘게 줄였고 이 때문에 서울차량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86퍼센트에 달하는 열차가 정비 기준을 지키지 못한 채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정선영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가 드러낸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별 기대가 없었지만, 그나마 약속받은 정책들도 하나둘 파산하고 있다.

‘4대약 근절’에 포함됐던 ‘성폭력 근절’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서 여성 인권을 알뜰모로 찾아가 엉덩이를 움켜쥐려 역겨운 성폭력 사건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인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도 ‘여성 대통령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1백 36개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제적 참여·정치 권한·교육 수준 등의 격차를 분석해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백 11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OECD 국가들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다.

박근혜가 그나마 내세웠던 ‘무상 보육’ 정책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겨서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조차 질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보육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민간 어린이집들의 행태를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복지 공약뿐 아니라 ‘2015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약속도 사기로 드러났다. 이 정책의 파산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박근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결국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이었을 뿐이다. 임금 차별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심지어 해고 사유가 광범해, 고용 불안조차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전환 규모도 2015년까지 6만 5천 명으로, 1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에 비춰 보면 새발의 피였다. 정부는 민간위탁 등 대다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파악할 생각조차 없다.

106주년 여성의 날에 즈음해 노동조합의 여성 활동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바로 시간제 일자리다.

박근혜가 ‘고용률 70퍼센트’의 대표적 수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여성을 겨냥한 것이다.

박근혜는 이를 뒷받침하려고 최근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지적하듯이, 이 방안은 경력 단절의 주된 원인을 ‘고용 유연성 부족’에서 찾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 유연화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

이미 존재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최악의 일자리다. 월평균 임금은 65만 원밖에 안 되고, 시간제 노동자의 37퍼센트가량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비율이 69퍼센트다.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73퍼센트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가 자발적 선택일 리 만무하다. 2012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자를 제외한 15세 이상 인구’ 중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14.2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도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을 의



저질 일자리에서 저임금으로 일도 하고 애도 보라고?

식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시간에 비례해 차별 없이 임금, 승진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얼핏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전일제보다 승진이 곱절가량 뒤쳐질 수 있고, 노동시간이 적은 만큼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뜻일 뿐이다. 정부조차 이런 현실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과 시간제 교사들이 ‘투잡’을 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독일에서는 시간제 교사가 피자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정년 보장 약속도 믿기 어렵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될 때도 계약서에는 정년 보장이 명시돼 있었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량으로 해고됐다. 대선 공약 중 지키는 게 거의 없는 박근혜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에선 문제의식이 있으면서도, 시간제 일자리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간제 노동에 대한 차별 금지라든지, 전일제로의 전환 같은 방안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네덜란드나 독일 모델이 이런 시간제 보호 장치가 보장된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도입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카텔레네 파쉬어 네덜란드노동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전일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파트타임 노동자가 풀타임으로 전환을 요구해도 기업에서 ‘일감이 없다’고 하면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없다”, “[법과 달리] 현실에서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전환

이 더 쉽고 그 반대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독일의 좌파 정당 ‘디링케’ 활동가인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역시 독일노동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의 수준만 비판했지 개악 그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줄어드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단 급한 위기를 넘기자 기업주들은 결코 호의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규직을 비정상적인 고용으로 대체했다”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문을 열어주지 말고 유보 없이 반대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이중의 굴레!

물론 보육이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라도 얻길 원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이런 여성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더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했지만 전일제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주로 전일제 일자리에 속해 있는 남성과 주로 미니잡을 채택하는 기혼 여성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낳았다(민주노총, <시간제 일자리 확대 비판 정책보고서>).

시간제 일자리처럼 저임금이다,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한 일자리가 확대되면 일자리 전반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노동계급 내 격차가 심화되고,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된다.

박근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주장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가사노동과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계속 지우면서, 저질 일자리에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며 일도 하라는 뜻일 뿐이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서 시간제가 유일한 해법은 결코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스웨덴은 출산율도 높고, 정규직도 많다.

반면 네덜란드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보육시설이 축소됐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가사와 양육 책임을 떠안으며 경력 기회가 제한됐고,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받았다.

따라서 조직노동자 운동은 시간제 일자리에 적극 반대하고,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진정한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여성들이 질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보육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또, 여성들이 육아기에도 유급 휴가를 차별 없이 쓸 수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비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지 않고 출산 후 원래의 업무로 복직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남성들이 육초가 되도록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생활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육아를 분담하기가 몹시 어렵다.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만 한편에선 전일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공공부문부터 확산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마저 고용이 불안한 단시간 노동으로 만드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시간제 공무원 도입 등을 막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받는 공무원’과 ‘공무원연금 못 받는 공무원’으로 분열돼, 공무원 노동자들 내의 단결에도 해롭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노동계급 전체, 특히 나쁜 일자리를 강요받을 여성과 청년에게도 해악적이므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도입 반대 요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 정책, 보육 책임 여성 전가로 여성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조직노동계급이 공유의 강력한 잠재력을 발휘해 여성 차별 반대 투쟁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해 철도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억눌린 피억압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호민관 구실을 했듯이 말이다.

최미진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에서 유래했다.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여성의 투표권과 노조 결성권을 요구하며 맨하탄의 동쪽 심장부에 있는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주로 뉴욕에 있는 의류 산업의 초창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2만 인의 반란’으로 알려진 1909년 13주 동안의 파업에서 절정에 올랐다. 파업 노동자들은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고,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의 평등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 독일의 사회주의 혁명가 클라라 제트킨은 1910년 제2인터네셔널 국제노동여성회의에서 해마다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할 것을 제안했고 1911년부터 경축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도 매해 세계 여성의 날을 ‘투쟁하는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추천 소책자



국제 여성의 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500원, 24쪽.

빼앗아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주디스 오어 지음, 이나라 옮김, 3,000원, 91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106주년 3·8 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대회
여성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하라!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여성 노동권, 생존권 외면하는
박근혜 퇴진하라!

2014년 3월 8일 (토) 2시 | 보신각
주관: 민주노총
주최: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확대 간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아마도 2월 17~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44.1퍼센트)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 이런 결정의 한 근거가 됐을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재적 대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41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노조가 규약을 이와 달리 정한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조 규약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재적 대비 과반이 찬성해야만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법조항은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명백히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조항이다. 일정 투표율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투표자의 의사를 존중해 쟁의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찬반투표의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절반이 넘는 59퍼센트였다(<현자지부소식>).

또한 지난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가 강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 사회운동 내부에도 연성 자를 사상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노조 규약도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투표자의 60퍼센트 가까이 파업을 찬성했다면 금속노조는 과감하게 파업을 선언하고 산하 조직의 동참을 명령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실제로 소수 지도자들은 그런 의견이었던 듯하다.

물론 여기서 합법성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파업은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돼야 합법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주는 절차뿐 아니라 목적·방법·주체 모두에서 파업을 제약해 노동자들의 힘과 파업의 효과를 최소화하려 한다. 실제로 2월 25일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치 파업이라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2·25 파업과 같은 정치 투쟁에 적극 나설 때 자신의 이익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연금 개악 등에 맞서는 투쟁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할 때도 노동계급의 다른 부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법적 요건 갖추기를 중시한다면 노동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철도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해 탄압했지만, 철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우자 다른 노동자들을 포함한 광범한 대

중은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냈다.

노동자들의 힘과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합법주의에 간혀서는 안 된다. 사용자 등 지배자들의 의도는 오로지 노동자들이 그 법을 인정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울 때만 관철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냉담하지 않다

높지 않은 찬성률은 또한 파업이 너무 뒤늦게 조직된 문제점을 보여 주는 것이지, 조합원들의 냉담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장을 순회하고 나서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철도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침탈로까지 이어졌던 지난 연말만 해도 분노가 들끓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문제와 연결해 2.25총파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노동과 세계>)

이런 패일수록 금속 투사들이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2월 25일 파업

을 조합원들 자신의 요구와 잘 연결시킨다면, 통상임금 등 올해 투쟁의 출정식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이자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의 파업 찬성률이 높지 않게 나왔다. 이는 무엇보다 큰 아쉬움이다. 기아차지부는 투표자 대비 찬성률이 50.9퍼센트로 절반을 겨우 넘었고(재적 대비 찬성률은 32.7퍼센트), 현대차지부는 투표자 대비 찬성률(44퍼센트)과 재적 대비 찬성률(35.6퍼센트)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로 지부 지도자들의 열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2월 25일 파업을 설득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아차지부는 지난 석달 동안 계속 대의원대회 중이었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2월 25일 파업을 반대했다.

그는 찬반투표를 닷새 앞두고 발행된 <현자지부신문>의 노설에서 “이상적 정의감”에 내몰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겠다고며, “동의되지 않은 투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부 지도자가 적극 나서 파업 가결 호소를 하지는커녕 2월 25일 파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러나 이경훈 집행부가 “정치[투쟁]에 발목 잡히지” 않고 ‘8+8 근무의 정착,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같은 숙제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소위 ‘현실론’은 전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정치는 농축된 경제

러시아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정치는 경제의 농축된 표현”이라고 했다. 정치적인 문제들의 근저에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존재하는 핵심 모순인 계급 착취가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를 회피하고는 결코 경제적 현실도 직시할 수 없다.

실제로 통상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임금체계 개악은 모두 현대차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는 문제다. 통상임금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동부 지침이 모두 현대차 노동자들을 정조준해 불리함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이미 전 계급적 문제의 선두에 서게 됐고,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만 자신들의 이익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정부와 기업주의 공세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연금 개악에 맞서는 투쟁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할 때도 노동계급의 다른 부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투사들은 기층에서 이런 점을 설득하면서 현장조합원들이 2월 25일 파업 집회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또, 2월 25일 파업의 열망을 공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과 연결해 조직해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통상임금 투쟁의 고삐를 조이자

본격적으로 통상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기업주들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적용해야 하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새로운 입단협 체결시점으로 미루고, 상여금마저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라는 파렴치한 지침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기업주들은 지금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와 시점을 늦추려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지부가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에 대해 “처음부터 현대차를 염두에 두고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근거 있는 의혹

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정몽구는 사측의 일방적 시행체치를 끄집어내 ‘현대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양 해석하고 있다.

시작되는 저들의 공격

기업주들은 치밀하게 야금야금 공격도 시작하고 있다.

첫째, 올해 입단협에서 성과급을 확대하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치밀한 준비를 할 것이다.

둘째,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려 노동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일부 공장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런 공격은 2016년부터 시행키로 한 주·야간 8시간 노동제 시행 전에 산업·특근 축소에 대비하고,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입사원 임금 삭감 등 임금체계

개악이다. 이는 일부 기업들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며 이미 개악됐다. 예컨대, 기아차에선 2013년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통상임금이 약 15만 원 이상 삭감됐다. 이중적인 임금체계가 관철된 것이다.

넷째, 사측은 이런 공격들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울산 1공장의 전무적대원들을 징계해고하고 손배가압류를 퍼부었다. 기아차 사측 역시 현장 투쟁을 이유로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10여 명을 고소고발하고 손배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올해 투쟁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사전에 제압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따라서 기업주들에게 입단협 때까지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 소송에만 매달린

다면 또다시 뒤통수를 맞고 조합원들의 임금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지금 정부와 기업주들은 통상임금 축소를 넘어 임금 삭감을 위한 다양한 수단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통해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성과·직무급제로 개악하고, 40대 중반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시도가 관철된다면 도둑맞은 임금과 미래의 임금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의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등이 앞장서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주요 노조들은 지금 당장 사측에 긴급 노사협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사내유보금을 1백조 6천억 원이나 쌓아 놓고 있다. 정몽구는 주식 자산만 6조 6천억 원, 정의선은 3조 3천억 원이다. 이런 자들에게 임금을 빼앗겨선 안 된다.

특히 대법 판결과 노동부 지침으로 현대차가 상여금을 적용받지 못하면, 기아차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정몽구가 순수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연유로 현대·기아차의 공동 투쟁이 중요하다.

이처럼 조직된 노조들이 적극 투쟁에 나선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을 올곧게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이 높지 않게 나온 것에 위축되지 말고, 현장에서 투쟁을 건설하자!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투쟁에 나선 대학 청소 노동자들

학생들이 지지와 연대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경비·시설정비·주차관리 등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서경지부는 7천 원으로 시급 인상, 원청인 대학과의 노동인권협약 체결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주고, 인권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모두 집단 교섭 내내 임금 동결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2월 5일 마지막 교섭에서 용역업체들은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는 집단으로 공무니를 빼고 달아났다. 집단교섭 시작한 지 4년 만에 최초로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은 분개하면서도 저들이 줄행랑 친 것에 실소했다.

줄행랑

교섭 결렬 직후부터 노동자들은 방학인데도 새내기 맞이 행사 때 학생들에게 리플릿을 반포하면서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3월 3일에는 개강에 맞춰 경희대·고려대·고려대병원·광운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강대·연세대·연세재단·이대·인덕대·중앙대·한예종·홍익대·서울여대·카이스트 분회 등 16곳의 노동자 1천7백여 명이 동시에 하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집단교섭에 참가한 작업장 16곳 중 5곳이 작년에 새롭게 조직된 곳이다. 2009년부터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 미조직 상태이던 청소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한 것이다. 이런 투쟁으로 조직된 직종도 다양해졌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서 시작된 조직화가 이제는 차량운전, 시설정비, 주차관리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해마다 최저임금 기준을 올리는 상징적인 투쟁이었다. 그런데 이제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 노동자가 최저임금이라는 공식은 깨졌다”며 당당하게 말한다. 투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 노동자들의 삶은 팍팍하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학교가 얼마 전에 갑자기 주말 특근을 없애 버렸다. 그래서 한 노동자는 “토요 근무 폐지로 25만 원이 삭감됐다. 남자는 30만~40만 원 삭감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도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는 임금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다.

“진짜 사용자”인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을 내려서 임금을 올려 줄 수 없다’며 노동자와 학생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올해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1퍼센트로, 내렸다고 말하기도 차사하다.

게다가 등록금 인하는 임금을 인상하지 못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런 탐욕스러운 주장을 하는 집단 교섭 참가 대학 중 5곳이 올해 누적 적립금 10위 안에 들어 있다. 대학들은 학생에겐 고액 등록금을 뺏아 먹고 학내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쥐어짜며 돈을 쌓아 온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자와 학생은 하나의 적을 상대로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양효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신해(노동자)가 노동자

생활 임금 쟁취를 위해 3월 3일 하루 파업을 준비하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일수 열사 10주기 추모집회

현대중공업에서 원·하청 연대가 시작되다

“나의 한 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가 분신했다.

박일수 열사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악랄한 노무관리에 맞서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고, 이에 맞서 투쟁하다 분신했다.

해마다 박일수 열사 추모집회가 열렸지만, 올해 10주기 집회는 더 뜻깊다.

어게 걸고

12년 만에 민주파가 당선한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 집행부가 박일수 열사 추모집회를 지원하고 함께 준비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는 박일수 열사 추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고, 공장 안 박일수 열사가 분신한 곳에서 집회를 했다. 저녁 추모집회에도 예년과 달리 정규직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인 사내하청지회장은 연설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이미 원·하청 공동투쟁은 시작됐습니다. 열사 추모 기획회의부터 현중노조 동지들과 함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내 식당 게시판에 열사 추모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9년 만에 현장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조합원도 참가하고 현중노

조 조합원들도 참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어깨 결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의 공장을 사람 사는 공장으로, 인간답게 사는 공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0주기 추모집회를 맞이해 원·하청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거대한 투쟁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집니다.”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도 연설에 나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연대를 강조했다.

“박일수 열사가 자기 몸을 불살라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추모 자리에 나와 발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는 박일수 열사가 산화한 그 장소에서 노동조합 공식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중공업에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생각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단결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내협력 노동자들의 조직 확대를 포함해, 모든 것들을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하청인 지회장은 이날 집회를 평가하며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집회로 원·하청연대의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한 달 전부

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참가를 조직했습니다. 사측의 탄압 때문에 집회 참가는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깜짝 놀랐습니다. 현중노조의 노력도 일부 작용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중노조와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청노조 인정과 노조 조직화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방패막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12년 만에 민주파가 당선됐다. 조선업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사측에 아무런 방패막 구실을 못하는 친사측 세력이 패배했다.

조선부문 기능직 노동자의 69퍼센트가 비정규직인(2012년 기준) 현대중공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사례처럼 사측은 위기가 심화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그 칼날은 곧바로 정규직 노동자를 향할 것이다. 최근 한국GM 사측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

정규직 민주파 집행부 당선에 현대중공업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규직·비정규직 동지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허수영



신해(노동자)가 노동자

부당한 탄압과 신규채용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또 연기 법은 정몽구 앞에서만 평등한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천1백여 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또 연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천6백여 명이 2010년 11월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2011년 7월에 각각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3년 넘게 표류하던 소송이 선고 하루를 앞두고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을 철저히 짓밟았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선고 연기를 규탄하며, “재판부가 현대차의 압력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것은 아닌지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사측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들의 절규는 외면하고, ‘불법파견의 몸통’인 정몽구는 옹호하고 있다. 정몽구는 네 번이나 고소·고발을 당했는데도 검찰 기소조차 안 된 반면, 사측이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은 이미 1심 판결이 나 1백3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청구됐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현대차 사측은 6백80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자들은 월급 통장과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고, 2010년 점거파업 파업 이후 해고된 노동자 1백여 명은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신규채용까지 강행하고 있다.

정몽구는 부당한 탄압과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기선

3월 22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준비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 양극화 등을 배경으로 유럽 곳곳에서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강화도 파시스트들의 자신감을 부추겨 파시즘의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파시즘의 성장이 가장 위협적인 곳은 헝가리와 프랑스다.

이에 대응해 유럽의 좌파들은 3월 22일에 맞춰 '인종차별 · 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을 조직하고 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인종차별 반대의 날이기도 하다.

“너무 늦기 전에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새로운 저항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지난해 가을 그리스의 ‘인종차별 · 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이 이 행동을 제안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유명 힙합 가수 파블로스 피사스가 골수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지지자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항의해 아테네에서만 5만 명이 거리로 나온 커다란 운동이 일어났다. 우연찮게도 피사스가 살해당한 날은 그리스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긴축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날이었다. 공공부문 파업은 그리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파시즘 시위가 일어나는 데 한 몫했다.

이런 압력에 밀려 그리스 정부는 황금새벽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등 황금새벽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위대한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였다.

그 직후에 열린 국제 반파시즘 회의는 이 승리에 힘입어 성황리에 치러졌고, 여기서 ‘인종차별 · 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을 조직하자는 제안이 통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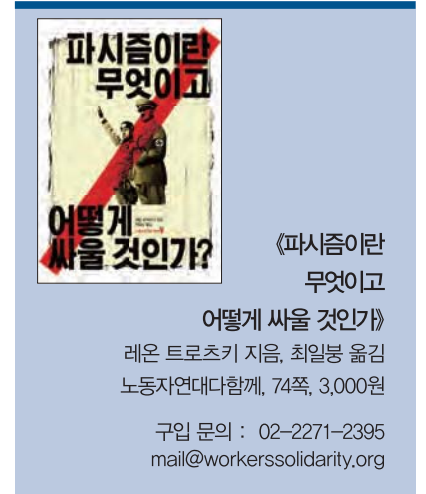
현재 준비 상황을 보면, 특히 그리스와 영국에서 서로 자매단체 관계인 두 나라 사회주의노동자당 주도로 최대 규모 시위가 일어날 듯하다.

그리스에서는 KEERFA를 포함해 공무원노조연맹(ADEDY), 아테네 시의회, 학생회, 이주노동자 공동체 등 여러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반파시즘연합(UAF)과 영국노총이 공동 주최하고 유나이티드(운수 일반노조와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노조), 교사노조(NUT), 공공서비스노조(UNISON), 공무원노조(PCS), 영국일반노조(GMB), 우편통신노조(CWU) 등 주요 노조가 후원하는 집회와 행진이 기획되고 있다.

차승일

관련 소책자



단결된 운동은 파시스트를 패퇴시킬 수 있다 2009년 영국의 파시즘 정당인 영국국민당(BNP)에 항의해 반파시즘연합(UAF)이 조직한 반파시즘 시위

사진 출처: James M. Thorne (블리커)

프랑스 사회 우경화 조짐과 좌파의 과제

1월 26일과 2월 2일 프랑스 우파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월 2일에는 파리에서만 1만 7천 명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우파들은 가족법 개정을 중단하고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가족법 개정은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으로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여성 동성애자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지원책 등이 법 개정에 포함되려 했다.

우파들의 시위 하루 만인 2월 3일, 올랑드 사회당 정부는 가족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후퇴했다. 연립정부에 속해 있는 녹색당 대표도 “보수 진영의 시위 다음 날 개정안을 철회하더니 어처구니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올랑드 사회당 정부의 후퇴와 배신은 이것만이 아니다.

반긴족 정서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올랑드는 당선 후에는 계속 긴축 정책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는 “책임 협약”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기

업주들은 고용을 유지하면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그 규모가 2017년까지 자그마치 3백억 유로(약 44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또 책임 협약에는 복지비 지출을 2백억 유로(약 29조 4천억 원) 삭감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록적 실업률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복지를 줄이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노조들도 책임 협약에 반대했다.

또한, 올랑드 정부는 인종차별적인 무슬림 차별을 유지하고, 지난해에는 프랑스 거주 로마인* 약 2만 명을 추방했다. 2012년의 갑절 수준이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함께 이런 후퇴와 배신으로 올랑드의 지지율은 2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서 우파와 파시스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3월 23일) 때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지지율 29퍼센트로 1위

를 차지했고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이하 FN)이 17퍼센트로 3위를 차지했다. 집권 사회당은 21퍼센트로 2위를 했다. 2012년 대선에서 올랑드가 28.6퍼센트를 득표한 것에 견줘 약 7퍼센트 하락한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브리뇰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는 FN의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됐다. 5월에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FN이 1위를 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기회

그래서 프랑스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전망이 많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고통의 증가와 사회당 정부의 배신이 우파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할 필연성은 없다. 2012년 대선에서 좌파전선의 후보 장뤼크 멜랑송이 매우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킨 것을 보면, 사회당의 배신으로 생긴 공백을 좌파가 메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랑스 좌파들은 기

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은 사회당과의 동맹에 매달리며 사회당의 공무리를 좇고 인종차별에도 확고히 반대하지 않아, 앞서 말한 브리뇰 선거에서 3위를 해 결선 투표에 나가지도 못했다. 브리뇰의 현직 시장이 공산당원이었는데도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다. 공산당의 이런 행보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주도적 구실을 하는 좌파전선도 대선 이후 내부 갈등으로 마비됐다.

극좌파 정당인 반자본주의신당(이하 NPA)도 존재감이 별로 없다. 게다가 지난해 메이데이 기념 집회가 수십 개로 따로 열리는 등 좌파들의 분열도 심각하다. 2010년 가을 노동자 2백만 명이 파업에 나서며 강력하게 투쟁을 벌인 이후, 몇 년 동안 노동자 운동도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가능성이 모두 단절되고 할 수는 없다. 지난해 로마인 학생 추방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고, 반파시즘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가 파시스트에게 살해당

한 후 큰 반파시즘 시위가 일어났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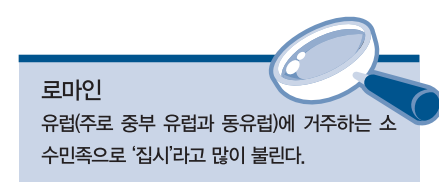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3월 22일로 예정된 인종차별 · 파시즘 반대 국제 행동의 날이 어찌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NPA를 포함해 20여 개 단체가 이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이 잘 건설된다면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다시 운동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파와 파시즘에 맞선 단결된 운동을 건설할 뿐 아니라, 올랑드의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에도 맞선 실질적 저항을 조직해 낸다면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차승일



네덜란드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시간제 일자리 천국”이 아니라 여성 차별 지옥

박근혜 정부는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 덕분에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의 기자 로프 게텐센은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과 여성들의 현실을 말한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정치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관료주의적 개혁주의와 노사협조주의(때때로 간행물에서는 급진적 언사를 사용한다)라는 오랜 약속이 있다. 지난 세기에 오래 지속된 ‘기동화’가 이런 약속을 강화했다. 기동화란 사회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블록’으로 심각하게 나뉘어, 이 각각의 ‘기동’들이 정당, 노동조합, 학교, 동호회, 교회 등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노동계급과 노동자 운동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사회 전체에서 부르주아 기독교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1970년대에 와서야 가톨릭계 노조들과 사회민주주의계 노조들이 통합해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FNV)을 창립했다. 전국기독교노동조합연맹(CNV)은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분리돼 있다.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화 수준이 다소 낮고 특히 청년들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도가 낮다. 그리고 관료주의가 강하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로는 주로 ‘폴터 모델’의 전통이 강했다. 폴터 모델은 노조 상층 관료, 사용자 단체, 정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협상과 심의를 하는 제도로, 양자·삼자 협의의 항구적 체계이고 노동시장 규제 등을 다룬다. 폴터 모델은 사민당과 부르주아 정당들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전통과 결합됐다. 핵심은 단체협약(네덜란드어로 CAO) 조항인데, 협상 당사자 외 참가를 의무로 규정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에서 폴터 모델은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는 보편적 임금 억제 전략으로 기능했다.

‘협약의 어머니’인 1982년 ‘바세나르 협약’

1980년대 초는 1950~60년대 자본주의 경제의 ‘황금기’가 끝난 이후에 찾아온 경제 위기와 경기 후퇴의 시대였다. 1974~75년의 전반적 세계경제 위기에 [네덜란드] 부르주아지는 다소 케인스주의적인 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다 신자유주의, 프리드먼, 레이건, 대처,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루트 루버스 정부의 시대가 왔다. 1982년 사용자들과 FNV(나중에 총리가 된 빔 록이 이끌고 있던)는 정부와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의 압박을 받으며 바세나르(헤이그 근처의 부유한 도시)에서 악명 높은 협약에 서명했다. 불가 연동 임금인상제가 폐지됐다. 임금과 복지가 쪼개져 나갔다. 이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장기적 공격이 시작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은 진행중이다.

네덜란드에서 복지국가는 주로 1950~60년대에 형성됐다. 1950년대에 복지 영역에서 수많은 법안(예를 들면, 국가 노령연금)이 통과됐지만, 이것은 그전 수십 년간 밀려 있던 숙제를 해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1963년 공공부조법이 제정돼 1912년의 빈민법을 대체하는 등 사회적 부조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했다.

바세나르 협약이 체결된 직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했고, 이는 장기적인 전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실업에 맞서 싸우며 주간 노동시간을 확실히 단축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자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파업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9주간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2010년 4월.

본가들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도 착수하고 싶어 했다.

1980년대에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그랬다. 그리고 23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은 ‘청년 임금’이라는 매우 고약한 임금 체계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예를 들어 15세 청년은 최저임금의 30퍼센트를 받고 22세가 되도 85퍼센트를 받는다.] 공공부문 평균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복지 혜택의 기초가 된다)의 구매력도 1980년대 이래로 크게 하락했다. 그 뒤 법정 최저임금은 ‘동결’돼서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폴터 모델의 역사에서 임금 억제는 언제나 경제 위기와 실업 증가에 대한 최초의 반사적 대응이었다.

시간제 일자리, 유연화, 실업

네덜란드는 수십 년간 세계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 주로 여성이 많았지만, 남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오랫동안 모성 이데올로기가 강했고, 1950년대 말까지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하면 일자리를 잃었다. [남성] 노동자들은 아내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면 자랑스러워해야 했고,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가 집에 있어야 했다. 그렇지만 (기혼) 여성이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 비율이 작았지만 말이다.

이런 생활 습관과 이데올로기는 1960년대에 바뀌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여성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광범하게 일어나면서 더 빨리 변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자본주의 경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고 (기혼) 여성은 일종의 산업예비군이였다. 그러나 여성이 유급 노동과 가사 노동,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했다.

현재 미국에서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의 19퍼센트인 것에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46퍼센트다. 성인 남성은 19퍼센트, 성인 여성은 73퍼센트가 시간제 노동자다.(2011년 기준)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첫째 이유는 남편이 실직하거나 남편의 임금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생존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와 업무량 증가 탓에 때때로 시간제 일자

리의 업무량은 전일제 일자리만큼이나 버겁다.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 중 하나는 당연히 임금도 시간제로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직종이든 다른 직종이든 여성은 언제나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있어도 여전히 (남편이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 여성이 일하는 많은 시간제 일자리, 예를 들어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은 임금이 매우 적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서 오전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는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가 유럽의 남녀 동일임금 규정을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늦은 1975년에) 받아들였지만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보다 훨씬 낮다. 2009년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80퍼센트였다. 2009년 남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2.25유로였고, 여성은 17.15유로였다. 여성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21.97유로)은 남성의 시간당 임금(25.59유로)보다 14퍼센트 낮았다.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높은 것이 한 이유가 돼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은 남성보다 상당히 낮다(52퍼센트 대 74퍼센트).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여성의 3분의 1은 독자적 소득이 없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3분의 1은 복지 혜택을 받는데, 대체로 장애인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유급 노동을 하지만, 주로 매우 짧은 시간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는다.

시간제 일자리로 강화된 여성 차별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이 차별 받는 문제는 시간제 일자리 탓에 악화됐다.

1950년대 말 이래 남성 한 명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지배적 가족 모델은 서서히 현실에 길을 내줘서 이제는 1.5명이 돈을 버는 가족 모델(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바뀌었다. 16~26세 청년 커플(부부나 동거)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나머지 절반은 동등하게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둘 다 전일제로 일하거나 둘 다 시간제로). 남성 한 명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형태를 바람직하게 보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일을 줄이지 않는다. 2009~11년에 이런 여성의 비율은 50퍼

센트에서 54퍼센트로 증가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인 여성의 비율은 4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줄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는 여성은 전체의 10분의 1이다.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여성들은 일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릴 수 있다.

4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맞벌이 부모가 공식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49퍼센트에서 2011년 44퍼센트로 떨어졌다. 반면, 4~12세 아동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맡기는 경우는 증가했다. 고학력 여성은 공공 보육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여성은 육아 휴가를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 (여성 49퍼센트, 남성은 27퍼센트).

네덜란드 인구의 다수는 아이가 있는 여성은 일주일에 2~3일, 아이가 있는 남성은 4~5일 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네덜란드 인구의 압도 다수는 부부가 무급 노동(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럴 계획도 없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2013년 11월 네덜란드의 공식실업률은 약 7퍼센트였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 평균인 12.1퍼센트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거짓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는 실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80만 명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중 다수는 얼마 뒤 파산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게 돼서 사실 실업자나 다름없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사상 최대로 커진 ‘워킹 푸어’[일을 하지만 매우 가난한 사람들]가 된다.

2008년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우는 <네덜란드의 저임금 노동>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임금 노동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다 적용해 봐도, 미국 임금노동자의 4분의 1은 저임금 노동자다.” 그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솔로우는 네덜란드에서 18.2퍼센트가 저임금 노동자이며,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 노동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그는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이라고 말하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전일제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임금을

적게 받는다. 심지어 시간제 노동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에서도 그렇다.” 대체로 저임금 노동은 서비스 부문에, 여성들에게, 청년들에게, 시간제 일자리에, 저학력자들에게 가장 많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실업은 이런 상황을 바꿔 놓을지도 모른다. 1979년에 40퍼센트였던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비율이 2002년에는 61퍼센트로 올랐다. 저임금 노동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위험하다. 저임금 노동은 이주민과 소수민족(특히 비서구 출신)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전일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유연하고, 불안정하고, 임금이 더 적은 일자리를 가지라고 강요받곤 한다. 지금 같은 위기 시기에 정부는 여러 부문, 예를 들어 예술 부문과 의료기관에서 재정 지출을 줄인다.

유연 노동은 기간제, 초단시간 호출 노동, 시간제 일자리 등 서로 매우 다른 종류의 비정규직을 섞어 부르는 말이다. 독일에는 미니잡(주로 여성)이 있다. [본지 115호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참조하십시오.] 이 부유한 나라는 아직도 법정 최저임금이 없고, 사회복지제도가 외벌이 가족을 바탕으로 설계돼 있다. 유연 노동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일자리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한다. 또한 기업들의 영업시간은 더 길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의료와 복지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의 80퍼센트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이다. 반면 같은 부문의 남성은 오직 30퍼센트만이 시간제 일자리이다. 경제 전체로 보면 여성의 50퍼센트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다.

‘강제된 노동’

실업이 증가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1980년대 초 이래 실업자들은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고 일종의 ‘자발적’ 노동을 하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최근 정부는 이런 ‘강제된 노동’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정책을 강화했다.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람’을 촉구하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남은 부분을 더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그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결코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만들기보다 노동자들의 통제 하에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은 줄이고 휴일은 늘리고 연금은 더 일찍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세나르 협약 같은 노사협조주의적인 합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생산 현장과 사회적·정치적 삶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아동과 노인을 돌볼 더 저렴한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가사 노동을 더 공평하게 분배하고, 가사 노동과 교육을 더 많이 사회화하길 바란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더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동조건이 형편없고 노동시간이 유연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는 많은 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급진적으로 오래 지속된 것을 봤다.

번역 이진화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2월 20일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는 노조 저항에 책임을 묻겠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겨냥해 직접 공격에 나섰다. 또, 박근혜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외주화를 통한 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레프트21>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사진)을 만나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리는 바와 그에 맞선 투쟁 계획에 대해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로 노리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박근혜 정권의 국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을 때, NLL,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등을 꺼냈지만 국면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었죠. 또, 박근혜 정권은 대선 공약을 다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공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단위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에 맞서 가스·철도 노동자들이 나서서 싸우고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국민연금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취약한 고리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세력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을 속죄양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은 정권에 있는데 그 책임이 모두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큼니다. 특히 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민원을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단합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 대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단협에서 보장한 학자금, 경조사비 지원 같은 복지 부분들이 공격받기 때문이죠. 공공기관 정상화는 민영화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부채해소를 위해 내놓고 있는 주요 정책은 자산 매각입니다. 가스나 석유처럼 자원을 개발해 온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은 결국 국내 대기업들이 매입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철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판매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철도의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인천공항철도를 다시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라는 것은 단지



신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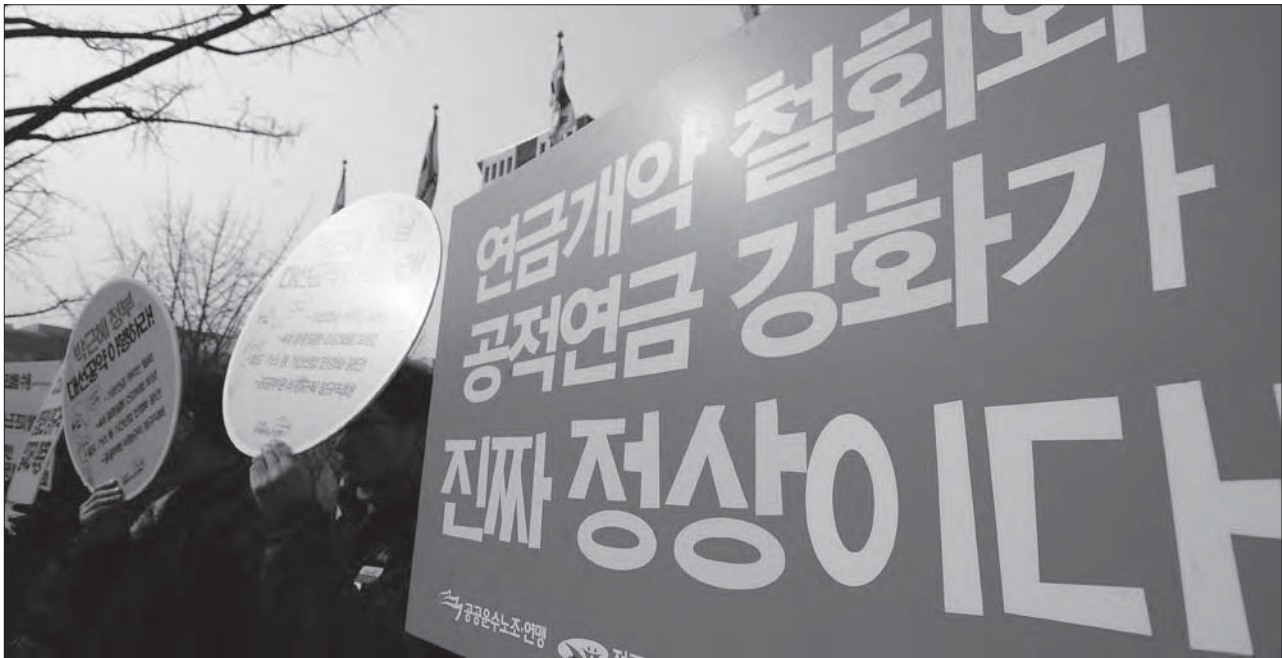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땅이나 건물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이익을 낼 수 있는 영업권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조합들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월 27일 3백5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계획을 결정할 겁니다. 우선, 공동 투쟁기금을 내고 공동 대응하려고 합니다. 단협 공격에 맞서 각 사업장 별로 노사합의를 하지 않고, 교섭권을 각 산별에 모두 위임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업장들에서는 3월부터 일제히 임금협상에 돌입하고, 다른 산별 연맹들에도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5월 말 정도에 투쟁할 수 있는 대응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고 단체협상을 공격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6월 중에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동원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9~10월에 예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때 임금 예산을 확보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쟁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강동훈

전교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5천 1백7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2월의 4천2백2명보다 23.1퍼센트나 늘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1~2년 만에 명예퇴직자가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명퇴 재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탈교단 러시’ 뒤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악되면 연금이 줄어든 것을 우려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교사들의 임금의 일부다. 생애소득의 일부이자 상대적으로 낮은 교원 급여에 대한 보상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식’으로 개악한다는 것은 결국 교사 임금의 일부를 빼앗는 것이자 미래를 훔쳐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사들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에 준해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은 모든 교사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노후를 위협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개악되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후퇴했다. 특히 2009년 개악으로 연금이 크게 하락했다. 교사가 내는 보험료는 27퍼센트나 인상됐고 수령 연금액은 최대 30퍼센트까지 감소했다. 2010년 이후 임용된 신규 교사는 노후소득이 1억 원 이상 깎이고,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 바람에 정년 퇴임을 해도 연금 받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당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공동 투쟁을 해 정부의 연금 개악안을 일부 좌절시킨 것은 물론이지만, 세대간 연금 단절에 타협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교사 간 ‘연금 불평



신대원 기자

공무원연금은 임금의 일부다 2월 20일 박근혜 정권 공공부문 정책 규탄 및 공공부문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등’은 향후 개악의 빌미가 되거나 교사 집단 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물론 교사라면 누구나 연금 개악에 불만이 많고 불안감도 크다. 지난 1월에 열린 전교조 전국일괄연수에서도 많은 활동가들이 공무원연금을 중요한 투쟁 과제로 꼽았다.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 그러나 교사들의 광범한 불만에 견줘 전교조 지도부의 대응은 아쉬운 면이 있다.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자신감 부족으로 교사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적극 요구하기를 꺼리는 듯하다. 그러나 교사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지만, 공무

원연금 적자가 노동자 ‘특혜’ 탓이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정부 부담률과 연금 기여자 수의 부족이 문제다. 프랑스의 정부 부담률은 62.1퍼센트, 미국은 35.1퍼센트, 독일은 100퍼센트인데 반해 한국 정부는 교각 9.6퍼센트만 부담한다! 또,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된 것은 결정적으로 IMF 직후 단행한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그 결과 연금 지출은 는 반면, 기여금을 낼 공무원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정부 부담률을 대폭 높이고 정규 공무원과 교사를 확충해 연금 기여자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실질적 해결책이다. 한편, 정부와 보수 언론은 ‘월세 먹는 하마’, ‘귀족 연금’, ‘국민 주머니를 터는 공무원연금’ 운운하며 복지 ‘먹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또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의

지를 꺾으려는 이데올로기 공격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이간질시켜 각계각파 하려 하지만, 둘 다 노동자 고통전가라는 면에서 한 몸이다. 지난 경험을 보면, 한쪽의 후퇴가 결국 다른 쪽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정부나 사용자들에게 양보하거나 고통 분담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전체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양보해도 결코 다른 노동자들이 덕을 보지 않는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전체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 나면, 국민연금을 더 노골적으로 개악하려 들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시간제 공무원·교사 같은 노동유연화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 공격을 전체 노동계급에게로 확대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격과 이간질, 각계각파 시도에 맞서 노동계급의 단결된 저항이 중요하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을 막아낸다면 이는 전체 노동자를 향한 박근혜의 공격을 무디게 할 것이며, 다른 노동자 부분의 자신감을 고무할 것이다. 부문을 넘어 전체 노동계급이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선 투쟁으로 뭉쳐야 한다. 설령 여론 지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단호한 투쟁으로 광범한 단결과 연대가 건설된다면 여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전교조의 시정명령 거부와 철도 파업은 사회적 지지가 투쟁을 만들 기보다는 그 반대로 강력한 투쟁이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는 것임을 잘 보여 줬다. **노동조건과 교육의 질은 연결돼 있다** 교사들의 연금은 교육의 질 문제와 연결돼 있다. 연금이나 임금 등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아이들의 학습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낸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교직의 인기가 올라가며 유능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 많이 유입됐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이 고용과 노후 안정을 꽤 보장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금 개악으로 교사들의 처지가 나빠지고 노후 불안감이 커진다면 경험 있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거나 젊은 세대들의 교직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미 지난 2009년 연금이 개악되면서 조기 퇴직이 급증했고 최근에는 ‘명퇴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교육의 질 향상은 그래서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교사가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쟁이기도 하다. 원영석 전교조 조합원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최근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에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을 철회하고 행정 전담 인력 등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2월 20일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은형 유치원위원회 위원장(아래 사진)을 만났다.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현장에서는 3~5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연령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들에게 모두 5시간 수업을 강제하고 있어요. 어린 유아들에게 5시간 수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3~5시간 수업을 해도 정부한테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3세 아이가 3시간만 수업하고 12시에 집에 가거나,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정부한테서 학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5시간 수업을 받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다 받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아주 적은 돈만 내고 복지를 한다고 생색내는 거죠.

얼마 전에 교육부가 5시간 수업 신청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교사들과 원장들에게 내부 메일로 보내 논란이 됐죠. 그런데 교육과정을 누가 구성해야 하죠?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해야 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어떤 실정인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 유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죠.

유치원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말해 주세요.

전국에서 행정 전담 인력이 있는 유치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하는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 유아 학비, 유치원 시스템, 정보공시, 학교 운영위 운영, 감사 채용, 임금 지급, 시설 관리, 차량 관리 등등.

그런데 저희들은 임용교사 보고 들어온 교사들이에요. 슬픈 일은 그 교학력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 할 교사들이 ‘방과후 교사 인건비 지급’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는 수업을 하는 것이 본분이지 않아요. 아이들 수업을 마치면 오후에는 행정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준



“하루 300분 수업 강제 중단” 무상보육의 비용과 책임을 유치원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2월 20일 교육부 앞 유치원 교사들의 단식농성.

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퇴근 시간이 저녁 9시, 10시일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전국에 공급 병설 유치원이 4천7백 곳인데, 유치원마다 전담 인력이 한 분만 있어도 돼요. 인력이 총합돼야 하는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만 3세는 16명, 4세는 22명, 5세는 25명 정도예요. 그보다 더 엄청난 어려움은 3~5세 혼합반이에요. 2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 놓으면 끔찍하죠. 3세 아이는 오줌을 하루에 9번 싸요. 그러면 유치원 교사는 그 아이 하나 돌보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교사의 눈조차 못 봐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의 80퍼센트가 혼합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치원 교사들의 투쟁이 돌봄 시설이 필요한 다른 노동자·학부모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유치원 교사들이 ‘3시간만 수업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학계나 교사들은 1백80분 수업이 유아 발달 단계나 아이들 집중력에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80분 수업이 40년 동안 유지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3시간만 수업하자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수업 시간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전담 교사가 배치돼 돌봄 교실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 줘야죠.

그동안 어떻게 싸워 왔는지, 그리고 이후 투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사 앞에서 [1월 22일과 28일]에 두 차례 전국 집회를 했어요. 경남, 경기에서 지역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 집회에는 3백~4백 명 정도가 모입니다. 서울은 19일에 집회를 했는데, 그게 두 번째 집회였어요.

서명을 받아 교육부, 시도교육청, 육아

정책개발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들 많이 말해요. 종일제가 들어올 때도, 정보공시나 학교운영위가 들어올 때도, 마음속으로는 ‘행정실 일인데’ 하면서도 그 일을 다 했죠.

우리 투쟁 때문에 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충남은 종전대로 3~5시간 수업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 가입이 늘고 있어요. 이 투쟁 전에 조합원이 9백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1천5백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6백여 명이 늘었어요. [전체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8천 명가량이다.] 경남에서는 집회장에서 바로 [전교조] CMS 동의서를 돌리더라구요.

2월 25일에 전국 교사들이 모이는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가 있고, 그때까지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계속해요. 서명도 계속할 겁니다.

인터뷰·정리 박태현 전교조 조합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만을 쳐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결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제68차 전국대의원대회(2월 22일)에 제출한 법외노조 관련 투쟁 계획은 안이해 보인다.

우선, 전교조 조합원들의 시정명령 거부와 ‘전교조 지키기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연대 구축 등 투쟁과

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맞이한 지난해 10~11월과 달리, 올해는 순전히 법적 대응에만 국한돼 있다.

또, 집행부는 설령 패소하더라도 “[CMS 전환으로] 조합 재정이 확보되고 조합원의 이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인식과 달리 전교조가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도 적잖다. 만에 하나 패소해 노조 전임자 복귀, 노조 사무실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해지와 단체교섭 중단 등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공격이 재개되면 조합원들이 동요할 수도 있다.

단체 행동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사안은 전임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판단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물론 “전임자 문제에 대한 원칙을 사전에 결정하여 일사불란



단체 행동은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올리고 연대의 구실을 만든다. 지난해 11월 전교조 결의대회.

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우익들이 전임자에게만 칼날을 겨누리라 예상하는 것은 사태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전망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패소하면 정부와 우익들은 득달갈

이 달려들어 전교조 전체를 향해 반동적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 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조합원 전체를 동원하는 단체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과 광범한 진보 대중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협 상황을 정치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을 결속시켜 미래의 동요를 미연에 최소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투쟁으로 재판부에 우리의 저항 의지 압력을 넣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치원 교사들의 투쟁은 집단 행동이야말로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올리며 연대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법외노조 공격에 맞선 집행부의 대응 계획에도 이렇게 조합원들이 단체로 참가하는 투쟁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 이 글은 전교조의 현장 교사들이 발행하는 <별책교사들> 13호에도 동시에 기고한 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 규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을 훌쩍 넘어 44.6시간이나 되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주 40시간 노동제가 껌테기인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업종에선 주 52시간 상한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제조업체 3백14곳을 감독한 결과, 무려 86.6퍼센트가 주당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열의 아홉은 밥 먹듯이 불법을 저지르며 추가 임금 지불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밀은 바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휴일근무’에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 관행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권해석을 제공하며 노골적으로 기업주들의 편의를 봐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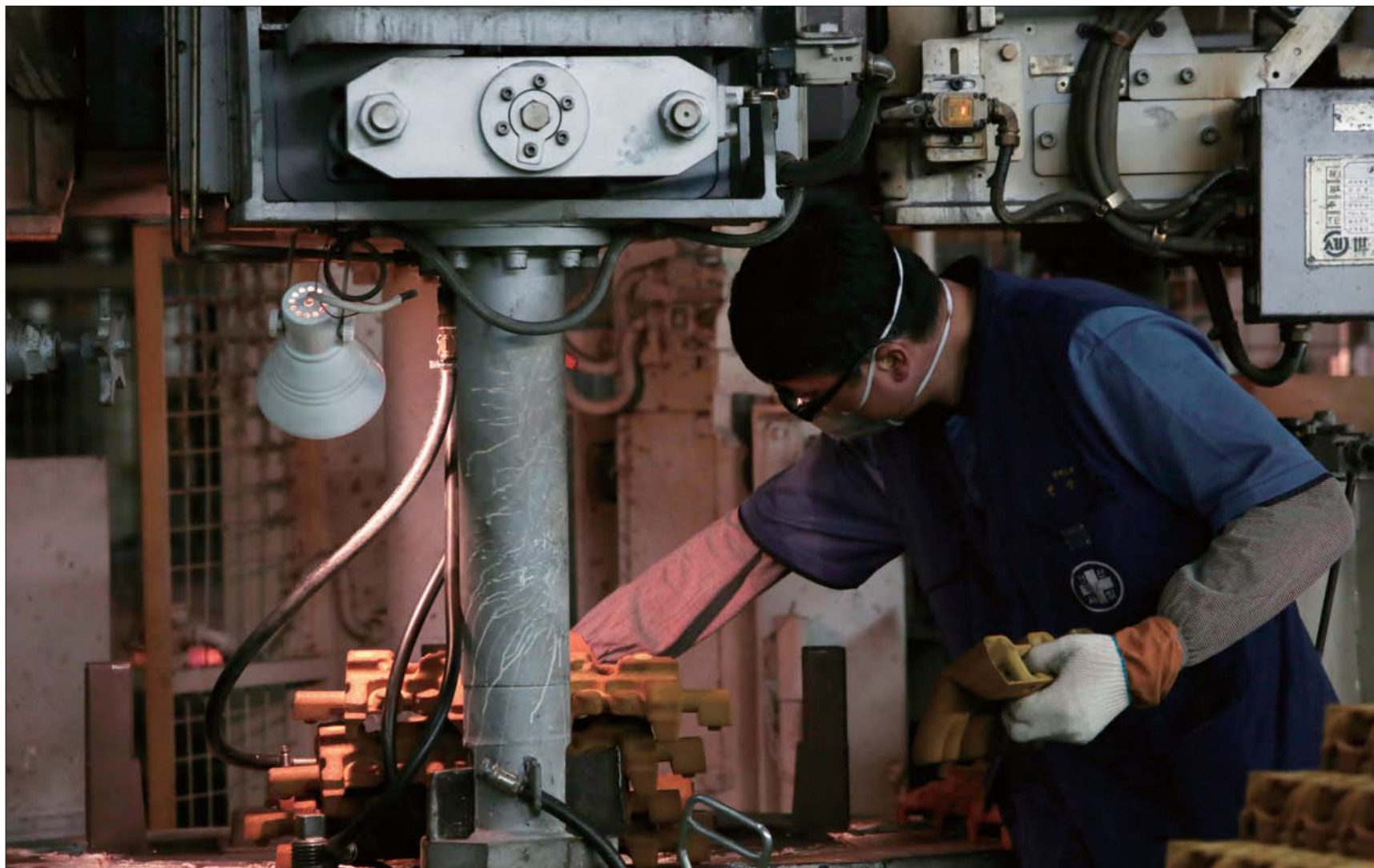
주말 등 휴일에 실시하는 초과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제멋대로 해석해, 52시간 외에도 추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휴일근무를 더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게다가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추가 연장근로 수당도 떼먹을 수 있게 했다.

물론, 노조가 있는 중대형 작업장에서 휴일근무는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이 그렇게 문제라면,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워낙 낮은 기본급에, 안정적 노후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야근·특근을 감수해 왔다.

휴일근무 = 연장근로의 일부

최근의 휴일근무를 둘러싼 논란은 이런 현실에서 비롯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



노동자는 스위치만 켜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40시간 기본노동 + 12시간 연장근로 + 16시간 휴일근무 ...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한국의 노동자들.

하며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이 낸 휴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은 ‘휴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주들은 ‘1·2심대로 판결이 나면 노동시간은 줄고 임금 부담은 늘어난다며 “기업 다 망하게 생겼다”고 계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재계는 갑을오토택의 통상임금 판결에 김앤장을 내세워 적극 대응했던 것처럼,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의 판결에도 적극 달려들고 있다. 최근 경총과 중소기업

중앙회는 재판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정부도 최근 이런 재계를 편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려 한다.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지만, 이 또한 말뿐인 사기였다. 단시간 노동을 늘려 평균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도 노동조건 개선과 거리가 먼 꿈수일 뿐이다.

물론 최근에도 정부·여당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1년에 6개월은 8시간 추가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1년에 절반은 주 60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주 52시간 상한

제 도입 시기도 기업 규모별로 6단계로 설정해 수년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하려 한다. 하루·주당 노동시간 상한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편법과 꿈수

종합해 보면, 정부와 기업주들은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각종 편법과 꿈수와 압박 넣기 등을 통해 불법적 장시간 노동과 임금 도둑질을 계속하려 한다. 정부가 일부 생색내기식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듭되는 뒷걸음질치기를 보면 이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국회 환노위는 노사정 소

위를 구성하면서 “대법원 판결 선고로 유예해 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어느 정도 강제해, 기존의 법원 판례대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무 수당을 되찾으려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투쟁을 건설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환노위 노사정 소위가 각계의 정치적 견해를 둘러싸고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급 간 세력관계에서 우리 편의 우위를 구축할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박설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줄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28시간이다. 전북·전남·경북·제주·세종 등에서는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 형태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에서 시간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직종으로 돌봄전담사를 예시했다. 그러자 일부 교육청들이 “교육 재정 여건을 고려해, 초등돌봄교실 전담 인력의 탄력 있는 시간 근무 배치”(서울교육청)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전담사 6백50명 중 기간제인 1백99명을 시간제로 강제 전환하고, 신규채용 인원에서도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확대 계획에 항의하는 초등돌봄강사들.

청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경기·전남·경남·경북 등 대다수 시·도 교육청도 전일제 돌봄교사를 시간제로 전환

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도와 전남에서도 이런 일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돌봄강사에 대한 시간제 확대는 가뜰이나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돌봄강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열

악한 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돌봄 교육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교육청들이 시간제 돌봄강사를 도입하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에게 저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강제’ 할당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가뜰이나 ‘비정규직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학교 현장에 노동 유연화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전문상담사의 대량 해고가 이런 문제를 낳았다.

또한, 돌봄교실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것도 시간제 확대의 한 요인이다.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안을 짜서 제출했지만 교육청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간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군비 축소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시간제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혹한의 추위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사흘간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돌봄강사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도 중요하다. 전교조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며 ...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그동안 (시행한) 각종 강사제도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한다면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비열하게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부터 시간제를 도입해 정규직 교원들에게도 시간제 교사 제도를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강화하려 한다. 따라서 전교조는 정규 교사에 대한 시간제 도입뿐 아니라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시간제 도입에도 맞서야 한다.

윤필언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부정한 ‘내란음모’ 판결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들도 4~7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고스란히 옮겨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반면, 피고측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무려 6백70여 곳이나 손질한 왜곡·과장투성이 녹취록과 국정원에 매수된 ‘제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정황이 폭로되며 국정원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도 마다 않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 누더기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는 검찰이 실체를 입증 못해 기소도 못한 ‘RO’가 “증거조사 및 심리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월에 끈지엄과 합정동에서 모인 게 ‘RO’ 모임이고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내란음모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전 경찰청장 김용판에게는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무죄를 선고하더니만, 이석기 의원 등 마녀사냥의 희생자들에게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증거만 갖고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고측 변호인단 김철준 변호사는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또한 ‘혁명동지개’, ‘적기개’ 등을 부른 것은 물론이고 ‘혁명의 투혼’과 같은 민중가요를 MP3로 갖고 있었던 것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마녀사냥 희생자들이 본 북한 영화들을 이적표현물로 판결했는데 이 영화 중 일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002년 발간한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선’에 포함돼 있다.

본질

똑같은 표현물이 누구에게는 허용되고, 누구에게는 이적행위가 되는 것, 바로 이 점이아말로 이 재판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것을 선명히 드러낸다.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난 건 죄가 아니고, 진보 활동가들은 북한 정권과 주장이 일부



머릿속 들여다보기 똑같은 표현물이 누구에게는 허용되고, 누구에게는 이적행위가 된다.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 합정동 토론회에서 일부 과격한 말이 오갔다 한들 자유롭게 견해를 교환한 일인데 이것이 처벌받을 일인가.

재판부는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에서의 피고인들의 활동과 사상이 “북한과 인식을 같이” 한다거나,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이들의 유죄를 선고했다. 또, “민중은 세상의 주체고 노동자 대중 계급은 변혁운동의 중심계급”이라는 주장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른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이런 마녀사냥적 성격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결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체적 실행 능력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내심의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내란 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2인 이상이 통모, 합의하는 것”이라며 “그 구성요건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이것이 보장되려면 특정 사상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문헌과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표현하며 타인과 견해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상”과 “목적”만

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람들의 머릿속을 검열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바로 이아말로 국가보안법이 최대의 악법인 이유 아닌가.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한 죄’ 조항도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과 다를 바 없는 반민주 악법인 이유다.

국가보안법에서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조항인 7조(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가입, 허위사실날조유포, 이적표현물 등의 조항)는 형법상 내란 음모 조항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할 만큼 내란 음모 조항과 국가보안법은 내용과 목적이 흡사하다. 지배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든 내란 음모 등에 관한 죄든 두루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경우 ‘헌법기관 중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변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국가변란’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이는 통치 권력에 반대하는 모종의 사상과 토론만으로도 형법상 내란 음모 조항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좌파들도 언제든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격 신호인 셈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2010년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까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청 영장을 받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8월 언론에 녹취록을 흘리며 내란 음모 사건으로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아마도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보다 생소하고 (용어에서) 공포심을 자아내는 내란음모를 내세워 공세의 효과를 높이려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국가보안법과 내란 음모가 모두 진보적 사상과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줬다. 이번 아니라 이번 판결로 박근혜식 ‘법과 질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맞춤식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음모’ 재판부는 정당 해산 심판에서 핵심 쟁점인 ‘RO’(진보당의 인

적 구성)와 ‘진보적 민주주의’(강령)에 대한 이적성을 인정해 정당 해산 심판의 근거를 만들어 줬다.

재판부는 ‘RO’가 기소 내용이 아니므로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놓고는 판결문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했다. 또한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던 것”이라거나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서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이를 두고 “진보당 해산 심판용 맞춤식 판결문을 만들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을 등에 업고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지난 1차 변론 때는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직접 변론에 나서기까지 했다. 최근 황교안은 “국가의 기본 틀이 자꾸 공격·패배당하고 흔들리는데 이런저런 다른 눈치를 보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강경 드라이브를 쉽게 꺾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철도 노조의 바통을 이어받으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이다. <한겨레>가 올해 춘투가 격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만큼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조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동시에 국가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정상화)도 밀어붙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마녀사냥으로 위기의 책임을 좌파에 전가하고 이를 통해 우파 결집을 노리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투쟁에 견제구를 날리고 진보진영의 분열도 유도하려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피억압자 운동은 정견의 차이에 상관없이 이석기 의원 등 마녀사냥 희생자들을 단호히 방어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운동은 일치 단결해 민영화 저지, 통상임금 투쟁 등 중요한 투쟁들을 강력히 건설해, 박근혜의 고통전가 공세에 제대로 맞서야 한다. 노동계급의 조직이 성장할 때 마녀사냥 공세도 적용 범위가 점점 제한될 것이다.

김지윤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이하 손잡고)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이 한창일 때 처음 제안돼, 한홍구 교수를 비롯해 하종강 교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했다.

당장에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는 등 손배가압류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잡고’가 대신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할 만하다. ‘손잡고’는 모금활동과 증언대회,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홍구 교수는 “지식인과 시민이 손

을 잡고 단절된 노동계와의 고리를 복원해 함께 싸워 나가자는 취지”(〈한겨레〉)라고 ‘손잡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 YTN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사회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시민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 투쟁이 소생하기 시작하자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불균등하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때,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투쟁,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거부 투쟁 그리고 철도 파업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노동자 투쟁은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에서 강력한 초

점을 형성해 왔다. 특히나 철도 파업은 단일 부문의 파업임에도 커다란 파급력을 끼쳤다.

노동자 투쟁이 사회적 연대의 구심이 되고, 강성 우파 정부에 맞서 싸워 정부를 위기로 몰아 넣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행동하는 지식

그래서 한홍구 교수는 노동자 투쟁의 힘을 적극 인정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노동자가 며칠 손을 놓자 수십억 원 손배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며 “노동이 위대하고 값진 것이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요구 사항을 내놓고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치니까 힘이 있는 것”(〈경향신문〉)이라고도 했다.

한홍구 교수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파

업은 힘을 갖고 있다. 생산을 마비시켜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경총이 2월 25일 민주노총 파업을 앞두고 “불법 파업” 운운하며 엄정대처 엄포를 놓는 것도 노동자 투쟁의 폭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은 이런 노동자 투쟁의 자신감을 드높이고 투쟁의 사상적 무기를 제공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작고한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며 행동하는 지성으로 이름을 높였다. 그는 연금 개악에 맞서 총파업이 벌어지자 이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연설을 하며 투쟁을 한껏 고무했다. 또, ‘행동하는 이유’라는 단체를 만들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반박하는 작은 책

들을 출간했다. 이 책들은 널리 읽혀 지배자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반박하는 훌륭한 구실을 했다.

그런 점에서 최초 제안자인 한홍구 교수가 밝힌 출범 취지에 비춰 볼 때, ‘손잡고’가 손배가압류 쟁점만으로 활동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한겨레〉가 올해 춘투가 격화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올해 노동자 투쟁이 더 한층 강력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공격 태세를 봐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손잡고’에 뜻을 모은 지식인들이 앞으로 벌어질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시야 속에서 더 심화된 연대 건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지윤



경제 위기, 중동 문제 등 온갖 난제 속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시진핑.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제국주의

지난 1월 28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런데 오바마는 주로 경제 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외교 정책에 관한 구상도 밝혔지만, 주로 중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반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언급은 한두 차례에 그쳤으며, 지난해 연설과 달리 북한은 오바마의 연설에서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내치에 치중하면서 ‘외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며, 외교에서는 그동안 강조해 온 아시아·태평양보다 “중동 지역의 현안”을 우선하기로 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한겨레〉칼럼니스트이자 미국 대외 정책 전문가인 존 페퍼도 이 연설을 소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오바마의 “아시

아 회귀[귀환]” 전략은 “중국에 경고하고 일본·한국·대만·기타 국가들을 안심 시키고자 설계된 광고 캠페인 이상”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오바마 정부 들어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들의 경쟁과 긴장이 커지는 것을 봤다. 다오위다오(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갈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격화, 2009~10년 남·북한의 서해 분쟁 등은 동아시아에서 열강들이 공공연히 적대하고 반목하기 시작했음을 실감케 한 사건들이었다.

그럼에도 국정연설에서 드러났듯이,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중동 문제

오바마의 “아시아 귀환” 전략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추세에 대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응책이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 실패와

2008년 경제 위기는 미국의 위신에 큰 타격을 줬다. 이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미국이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경쟁 제국주의 국가들(특히 중국)의 부상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오바마는 자국 패권을 유지할 수단을 강구해야 했고, 그것이 “아시아 귀환” 전략이었다. 즉, 처음부터 “아시아 귀환” 전략은 미국 정부가 상당한 딜레마와 어려움을 떠안고 시작한 것이었다.

그 딜레마의 한 축이 바로 중동 문제다. “테러와의 전쟁” 실패는 중동에서 미국이 누려 온 지위에 커다란 타격을 줬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실패가 낳은 부정적 유산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은 중동에서의 새로운 군사 개입을 주저하게 됐다. 이 때문에 오바마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명예롭게’ 마무리지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 그리고 그동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엄청난데 집종된 군사력의 일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돌려 왔다.

그러나 아시아로 눈길을 돌린다고 해서, 중동에서의 패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한테 중동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 “세계의 석유 수도꼭지”라는 중동을 손에 쥐고 있어야, 유럽과 동아시아의 잠재적 경쟁국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다. 특히 중동산 석유에 대한 중국·일본·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점차 커져 왔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랍 혁명과 그 여파는 오바마한테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였으며, 큰 근심거리였다. 아랍 세계 곳곳에서 친서방 독재정권이 잇달아 무너지거나 흔들리자, 지난해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치먼은 “이러다 [중동에서 미국의] 비공식 제국이 사라질 지경이다” 하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서 오바마의 대외정책에 의문이 제기될 만했다. 미국 지배자들 일부는 미국이 전략적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긴다고 하는 게 ‘정작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경쟁국이 영향력을 높일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집트 혁명, 시리아 내전,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 핵개발 등 이 지역의 산적한 난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서방 선진국과 중동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이 시리아 군사 개입에 실패한 일은 미국 지배자들의 고민을 더 깊게 했다. 영국 의회에서 군사 개입 부결, 군사 개입이 자칫 혁명에 미칠 영향 등의 이유로 미국은 막판에 군사 개입을 주저했다. 결국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게다가 미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상당한 역량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군비마저 축소하고 있는 지경이다. 미국 연방정부 섰다운 논란 때문에 지난해 10월 오바마가 APFC(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

은 참으로 시사적인 일이었다. 이 덕분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문제가 대외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고, 아시아 국가들한테 미국의 “아시아 귀환”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법했다.

우선순위

미국의 대외정책이 처한 딜레마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부상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는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 분명한 합의가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직접 견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가 미국 지배자들 일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행한 것도 중동의 불안정을 어떻게든 더 커지지 않게 붙들어 매고 아시아에서 중국을 더 견제하려는 의도가 컸을 것이다. 즉, 오바마의 “아시아 귀환” 전략을 단지 “광고 캠페인”으로 보서는 안 된다.

유라시아의 양쪽 끝인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건 냉전 때부터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유럽, 북미, 동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행사해야 미국의 세계 패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 가져온 지정학적 변화는 미국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한테 커다란 도전이다. 게다가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인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는 것은 미국이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지키려는 자국의 노력이 약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쇠퇴하





점차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미국의 “아시아 귀환” 전략은 단지 “광고 캠페인”이 아니다.

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은 국가 전략을 재고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동맹국은 자주국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것이고, 아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다른 동맹국은 사기가 꺾이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더욱 다가갈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 미국이 [세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다.”(에런 프리드버그, 《패권 경쟁》, 까치)

이 때문에 미국은 패배의 상처를 안고 경제 위기로 군비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동의 불안정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상처 입은 아수가 더 위험한 법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시리아 군사개입 계획이 좌절된 지 얼마 안 돼, 미국은 곧장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위예산 증액,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등”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 줬다. 마치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서 눈썰미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중국의 반발을 부르며 11월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상처 입은 아수

이처럼 그동안 미국의 “아시아 귀환”은 동아시아 불안정을 크게 키웠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군사적 영향력을 재고하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서 핵심은 일본의 전략적 종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큰 틀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의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아시아의 분열돼 있고 경쟁적인 지정학적 구조는 오바마가 이런 전략을 펼치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미국의 이런 노력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긴장과 경쟁을 키웠다. 그리고 미국·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국지적 충돌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긴장은 일시적이란은 있겠지만 점차 악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올해도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불거지게 할 쟁점들이 많다. 예컨대 올해 상반기에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도 올해 말에 개정할 것이다. 최근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군사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그때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한반도도 언제든 지난해 초와 같은 긴장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오바마는 대중국 포위의 명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약의적 무시)”를 고수해 왔다. 오바마 집권 후 지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1978년에 만들어졌고 1997년에 개정된 바 있다.

까지 6자회담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압박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2월 13일 한국에 온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가 방한 내내 대북 공조와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즉, 미국이 최근에 뒤흔들어진 한일 관계를 통합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할 카드로 언제든 “북한 위협론”을 띄워 널 가능성은 충분하다.

앞으로 미국 제국주의는 중동 문제, 경제 회복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계 서열에서 맨 꼭대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지만, 최근 들어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며 힘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아랍 혁명이 보여 줬듯이, 미국 제국주의가 전략적으로 집중해 온 동아시아 같은 곳에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 반란이 강력하게 터진다면, 그제 미국 제국주의를 가장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김영익

북한의 인권 억압에 대한 미국·남한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현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3백72쪽 분량의 인권조사보고서를 내놓고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온갖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보고서를 북한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 긴장과 갈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긴장을 빚고, 두 국가의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미국에 큰 골칫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 공조를 추진하는 데 ‘북한 문제’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북한 악마화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데도 유용하다. 며칠 전 방한한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는 다시금 북한핵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간 공조를 강조했다.

즉, 미국의 북한 인권 운운은 대북 압박과 이를 통한 패권 유지의 수단일 뿐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를 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구성을 보면, 이 기구가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는 세계 제1의 사형국인 중국과 동성애 탄압법을 제정한 러시아, 친미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수시로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으로 속죄양이 양산되는 한국이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국가들은 지난 몇십 년간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을 더한층 굶주림으로 내몬 장본인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은 외부 제국주의 세력의 압력으로 개선될 수 없다. 제국주의 국가의 위협은 오히려 북한 지배자들에게 인권 억압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위선적이기는 남한 지배자들도 마찬가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이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난리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압박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새누리당과 우익들은 인권 개선 운운하면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지원도 반대·삭감하면서 북한 ‘인권’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한 인도주의의 지원을 반대·삭감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식량 지원은 그 전에 견줘 크게 줄었는데, 심지어 취임 첫해에 박근혜 정부는(2백 억 원)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1천1백63억 원) 못하다.

정부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데도 매우 인색하다. 탈북민들은 가뜩이나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저임금으로 고통받는데, 이명박 정부 때 탈북민 정착금의 지원 기간과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심지어 정부는 탈북민들을 ‘잠재적 간첩’ 취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남의 나라 공문서를 위조하고, 여동생을 협박하고 고문해 거짓 진술 받아내어, 한 탈북민을 간첩으로 몰고가려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피우기’를 국내 마녀사냥에도 이용하고 있다. 2월 19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은 북한인권법과 함께 이석기 제명안을 언급하며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런데 이런 마녀사냥은 전혀 친북적이지 않은 사회주의자들도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제정 시기만을 문제삼을 뿐 북한인권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민주당도 문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 없고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임을 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모순과 한국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며 제국주의적 압력 행사와 개입을 반대해야 한다.

북한 인민의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수많은 평범한 주민들이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국경을 넘어 수만 명이나 탈출했다는 사실은 북한 체제의 문제를 드러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며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사회는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점에서 얼마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과 장석택 처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은 아쉽다. 진보 인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과 남한의 냉전 우익들이 부풀린 거짓으로 치부하며 침묵하는 것은 진보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로 말하면, 그들은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력 행사와 개입, 그리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면서도, 탈북민의 자유 왕래, 한국 정착 탈북

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 노동자·민중 자신이 북한 지배자들에 맞서 싸움에 나서기를 바라야 한다.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그랬듯,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쟁취는 오로지 북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 자기 해방 투쟁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은 북한 지배자들이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명분(“외세의 개입”)을 주기 때문에 결코 지지해선 안 된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노동계급의 파업과 저항은 꾸준히 성장하며 의식과 조직을 키우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격변은 북한 노동자·민중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국제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서 북한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을 바라야 한다.

맑시즘2014

일시: 8월 7일(목)~10일(일)
장소: 서울
주최: 노동자연대다함께

※ 맑시즘은 14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장호중

박근혜가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원도에서 아예 지방의료원 매각 계획이 흘러나왔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추진되는 또 다른 노골적 의료 민영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강원도가 의뢰해 진행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서 발표 공청회에서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2월 16일에 열린 이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자체 평가와도 상반되는 결론을 내놓았다.

원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존재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수준, “권역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개 기관으로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원주의료원이 유일함”, “권역내 의료 전달체계상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이라며 실컷 그 중요성을 말해 놓고는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거라고는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이 늘었다거나 “급성기 중증환자보다는 만성기 고령환자가 선호”한다는 게 전부다. 돈 안 되는 환자는 필요 없다는 식이다. 심지어 앞에서는 “경영 상태 악화”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보이고 있음”이라고 완전히 모순된 평가를 하고 있다.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도 “지역 내 경쟁 과잉”이라면서 대안으로는 대학에 매각해 “병상 증설 운영”을 제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강릉의료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3백13억 원을 투자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쳤고, 최근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완공하고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데도 이를 내다 팔라고 하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은 강릉·원주의료원 민영화 시도는 박근혜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부다.

원주의료원은 지난해에 건위 올해 환자 수가 5.2퍼센트, 의료 수입이 9.2퍼센트 증가했고 강릉의료원은 각각 15퍼센트, 31.3퍼센트 증가했다.

착한 적자

물론 환자 수 증가에 비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공공병원이 환자들에게서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경영 실적이 이처럼 '개선'된 것은 “10년 전부터 강원도 지방의료원에 대해 폐업과 매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강원도의회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매각(을 위해) 강원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도록 압박했고 5년간 매년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예산안마저 모두 삭감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연구용역 업체를 방관해 ... 부당한 압박”을 넣은 듯하다.(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최문순 도지사는 선거 당시 보건의료노조 등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시설 장비를 현대화해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고, 운영비

지원예산을 증액해 강원도민의 건강지킴이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하는 정책 협약까지 하고 당선했지만 새누리당의 압력에 후퇴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민주당 도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새누리당의 ‘민영화’ 압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라는 새누리당의 압력은 부당한 것이다.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과정에서 잘 알려진 바 있다.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이들 의료원의 적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필수

진료와 응급, 필수의료시설, 저소득층 환자 무료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으로 생긴 적자를 제외하면 적자 규모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적자를 없애고 경영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모조리 중단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던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없애고 병혹한 시장 논리에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내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 이는 진주의료원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고 지역의 다른 민간의료기관에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노동강도 강화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지방의료원 신축이전, 증축, 개축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차입하면서 발생한 차입채무”까지 제외하고 나면 적자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사실 이런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지방의료원에 떠넘겨 생긴 적자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폐업과 매각 압박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료원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의료진이 지방의료원을 떠나고 신규 투자를 가로막아 다른 민간의료기관보다 낙후된 상태로 10년을 버티게 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공공병원을 이런 악순환의 늪에 빠뜨려 놓고 이제는 아예 솜통을 뚫겠다고 달려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오는 2월 21일로 예정된 최종 보고서 공청회에서도 매각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공공의료 파괴 행위이자 공공병원 민영화”로 규정하고 결사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지역 활동가들은 의료원 폐쇄뿐 아니라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한 지역대행위 건설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반대 투쟁은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18~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지부 집행부와 대의원 2천 명 참가를 시작으로 하는 올해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의료 민영화 폭정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에 “산별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한 특별기금 마련과 3~6월 투쟁 계획도 확정했다.

대의원들은 이외에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민중 정책의 폐기’, ‘공공기관 정상화 대응’, ‘구조조정 저지’,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 및 단체협약 개선’ 등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했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철도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대사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광범한 사회적 연대의 구실을 형성할 수 있다.

여론이 60퍼센트였다면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은 90퍼센트 이상”이라며 “당사자들이 힘차게 결의하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많은 조직들이 언제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도 오는

3월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국에서 지역대책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월 25일 민주노총 파업을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진 민영화 반대 홍보전에 지역 노동조합들과 사회단체들이 참가해 기층에서도 투쟁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사진 출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가 인상 ‘떡튀’한 의사협회

의사협회는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 편을 들어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에 재를 뿌렸다.

더 나아가 “현행 수가체계의 불균형 해소”, “보상체계 개선”, “추가적 재원 지원” 등 수가 인상을 암시해, 의사협회가 사실상 수가 인상을 대가로 의료 민영화에 찬성해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았다.

사실 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었다. 의사협회는 2000년대에만 두 차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관치의료 타파’를 외치는 등 정부의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한국의 의사들은 자영업자와 비슷한 처지여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한다. 이런 조치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껴 반발할 수 있지만 파이 자체가 커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각자 머뭇속에서 열심히 주판알을 뱅기게 마련이다.

반면, 노동계급은 의료 민영화로 얻을 이익이라곤 하나도 없고 따라서 뭉쳐서 맞서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진영은 의사협회의 행보에 실망도 기대도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투쟁을 건설해가야 한다.